

금융개혁 주요내용과 기업경영

송 용 우 (기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이 급기야는 외환위기로 이어져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확대되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개혁방안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법률과 한은법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추가적인 금융개혁은 차기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안정대책(97. 11. 19)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개혁의 세부시행방안은 지난 6월 발표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방안은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과 수수료 및 금리자유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금융안정대책'과 함께 향후 금융산업과 기업경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금융개혁의 내용과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경영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기관 관련 단기과제 시행방안

금융개혁 세부시행방안에서 금융기관 관련 주요내용은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금융기관 경영 자율화, 금리·수수료 자유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금융관행 개선, 그리고 금융저축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인해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구분이 축소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일반은행에서는 자기자본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3년 이상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었다. 또한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에 대응하여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의 발행, 회사채 주간사 업무가 허용되었다.

증권회사는 기존 종금사 업무인 거액CP의 매매 및 중개업무가 허용되었다. 또 만기 1년 이상의 회사채발행이 허용되고 외국환 업무의 일부가 확대 허용되었으며 종금사는 유가증권 매매와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가 허용되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우 상해·질병·개호보험의 생·손보 상호경영이 허용되어 생·손보간 업무 영역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보험사에 기업연금 보험상품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화를 위해서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의무 대출 비율이 50% 이상인 금융기관은 그 비율이

〈금융기관 관련 단기과제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과 제	주 요 내 용	시 행
금 융 기 관 업무영역확대	• 일반은행 금융채발행 허용	97. 7
	• 산은·장은 CD·표지어음 발행 허용	"
	• 증권사 회사채 발행 허용 및 CP 인수매매중개업무 허용	"
	• 증권사 회사채보증 단계적 축소 폐지	"
	• 증권회사 외환업무 확대 허용	97. 11
	• 종금사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 취급허용	97. 7
	• 상해·질병·개호보험의 생·손보 상호 겸영	"
금 융 기 관 경 영 자 율 화	•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단계적 완화	97. 7
	• 외국환은행의 동일국가내 자지점 설치 자유화	97. 11
	• 보험의 신고상품 수리거부 사유 축소	97. 7
	• 증권사 신상품 신고 및 심사절차 폐지	"
금 리 · 수 수 료 자 율 화	• 4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97. 7
	• 은행의 MMDA 취급허용	"
	•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상한 규제 폐지	97. 9
금 융 기 관 부 실 자 산 정 리	• 은행 여신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공시의무화	97하반기
	• 모든 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연체 여신에 대한 공시 의무화	"
금 융 관 행 개 선	• 여신위원회 활성화 및 면책제도의 실제화	97하반기
	• 은행의 신용 정보 집중 및 유통 활성화	"
금 융 저 축 증 대	• 기업연금보험 상품 개발 추진	97하반기

자료 : 재정경제원

10%포인트씩 인하되었다. 증권사의 경우는 의무 대출 비율이 폐지되었고, 신상품 신고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보험사는 신고상품 수리거부 사유를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조치로서 모든 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연체여신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되, 은행의 경우 97회계년도말 실적분부터 고정여신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부실여신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98년말까지 대손충당금이 전액 적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신위원회를 모든 은행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용정보집중에서는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여신기준액을 개인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기업은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에는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등 3개월 미만 단기저축성 예금에 대한 4단계 금리자유화, 은행의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취급 허용과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관련 단기과제 시행방안

기업관련 내용을 보면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 폐지 등 기업자금조달에 애로로 작용할 요인이 있는 반면 해외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하고, 여신한도에 신탁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여신제한의 기준은 대출과 지급보증을 은행자

기자본의 45%로 제한하여 1997년 8월부터 실시하였고, 대출한도 초과분은 2000년 7월말까지 해소하기로 하였다. 즉, 대출한도 초과분을 즉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인한도제를 3년간 유지하고, 은행 총여신중 5대 및 10대그룹에 대한 여신비율을 제한하는 바스켓관리제도를 개정하여 유예기간동안 적용할 것이다. 또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해외금융이용과 관련한 조치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10.29)과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11.1시행)을 통해 대부

<기업관련 금융개혁 내용>

부 문	내 용	시 행
여신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10대계열기업 부동산 취득승인제 폐지 여신한도 (basket) 관리제 폐지 	97. 8 " 2000. 7
해 외 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차관 허용 폭 확대 상업차관 도입조건 및 차입자격 규제 폐지 외화증권발행 용도 구체화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용자비율 규제 완화 대기업의 중소기업발전채권구입의무 완화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규제 완화 현지금융 용도제한 완화 대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수출착수금 영수대상 및 연지급수입기간 확대 	97.10 97.11 " " " " " "
증 권 관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회사 회사채지급보증 단계 폐지 	97. 7
중 소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대출용자대상 및 비율확대(100%) 자금지원절차 간소화 	97.11
보 증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요율 차등화 부분보증제도 활성화 	97. 7 "
벤 처 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업체에 대한 용자한도 확대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97. 7 "
회 계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합재무제표 도입 	2000

자료 : 재정경제원

분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현금차관의 연간 도입한도(97년, 22억달러)가 확대되고, 각 용도에 따른 상업차관의 한도가 폐지되고 범위가 완화되었다. 상업차관의 용도는 시설재로 통합되고 외국인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97년, 10억달러)가 폐지된다. 상업차관 도입 때나 외화대출, 해외증권발행시 해당 사업 총소요자금의 외화 비중은 용도에 관계없이 대기업의 경우 80%, 중소기업의 경우 100%로 단일화되었다.

또 상업차관시의 금리제한 원칙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이 은행업을 포함해 업종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외화증권발행 용도를 시설재와 이에 직접 수반되는 기술도입비 및 용역비로 구체화시켰다.

무역신용에 있어서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확대, 수출착수금의 영수대상 및 연지급수입 대상 품목과 수입기간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증권관련에서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은 9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축소되어 98년 4월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는 여신업무의 일종으로 증권사업부 성격에는 맞지 않으며 과당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외화대출 용자대상 및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 규제를 폐지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또 보증제도에서는 신용도,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요율이 차등화되는 보증요율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회계제도에서는 총자산기준 30대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2000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지만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차기정권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금융개혁 세부시행 방안의 영향

향후 이러한 금융개혁이 정착되면 금융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고객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진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도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4단계 금리자유화로 금리경쟁과 은행 및 제2금융권간 단기저축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은행의 MMDA판매로 인한 중금사에서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은행권의 자금운용폭을 넓히는 반면 중금사 자금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가 도입되면서 개별은행의 특정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이 차단되고 그 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방지되고 단기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의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회사 회사채지급보증의 단계적 폐지는 무보증채 발행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지만 회사신용도에 따라 발행조건 차별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보증요율 차등화 등 기업신용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개혁에 의해 기업의 과도한 차입의존 경영은 시정될 것이며 신용도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규모 그리고 비용이 양극화될 것이다.

반면 해외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해외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여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와같이 금융개혁이 추진되면서 기업측면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 구조가 결정될 것이다. 즉, 자금조달 수단, 방식, 선택폭 등이 확대되면서 조달 구조의 다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 기회 및 비용이 양극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경영 측면에서 대응방안

이와같은 금융개혁의 추진에 따른 금융환경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각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이 자산이나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외형확대를 추구하는 것 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익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현금흐름을 좋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수요자인 기업은 첫째,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와 금융상품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선별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내부에 금융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방식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그룹계열사별 거래처 다양화, 담보분할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룹차원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해외금융의 규제완화로 국제금융시장의 이용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기업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야 하며 다양한 해외자금조달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 등과 같은 기업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와 대내외 신인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시사용어해설

< 모라토리움 >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지불유예를 의미한다. 법률로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의 이행을 유예시키는 것. 이는 한 국가내에서뿐 아니라 외국의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도 발동될 수 있어 대외결제수단이 부족한 나라가 해외에 진 빚을 일정기간 일방적으로 유예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모라토리움이 발동하면 일정기일 이전의 모든 채무지불은 일정기간 정지되고 예금의 인출도 제한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힌다. 그렇지만 광적인 현금수요를 평상시 상태로 회복시키고 통화 팽창을 방지하는 한편 예금자 불안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권채무의 일시적 동결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전면적 붕괴를 방지하는 비상수단인 것이다.